

‘재난 문자 오발송’ 정부 기관 책임 회피

대통령실 “서울시가 과도 반응” 민주당 “위기관리 시스템 심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발령한 위급 재난 문자 오발송을 두고 정부 기관이 서로 간 책임을 회피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날 31일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 위성인 ‘천리마-1’에 탑재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06:41 서울특

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잘못된 거 같다”며 “행안부는 (통신 위성)을 썼다고 통상 고지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 방송이 수신됨.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함.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시 당연한 절차임. 서울시는 7시25분, 상황확

인 후 경계경보 해제문자를 발송함’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국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맹목했다.

이날 북한의 정보통신위성은 2단 엔진의 비정상 시동으로 점화 및 연소 실패로 인해 추진력을 얻지 못해 추락했으며, 합참은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어청도 서쪽 200여 km 부근에서 인양했다고 발표했다.

홍정윤 기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

인천시의회, 용역 간단회 개최 현재까지 실적 추진계획 설명

인천시의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단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단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시의회 신영희·신성영 의원, 송일석 LCM 에너지솔루션 이사, 안상용 STN방송 회장, 이재욱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양병진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 이규영 랜드리에스 대표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등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강영훈 과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실적과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 사전 경관계획, 경제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강화남단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고려해 토지 원가를 비롯한 개발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며 “최대한 사업비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단회 참석자들은 “글로벌도시 시기획단의 연구용역과 오는 7월 착수를 앞둔 경제자유구역청의 용역 간 협업의 부재가 우려된다”며 “착수 전 개발전략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설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영희(국민의힘·웅진군) 의원은 “강화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영종 등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어서 용역을 집행하는데 집행부와 시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박용철(국민의힘·강화군) 의원은 “글로벌도시기획단과 경제청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회에서 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로벌도시기획단과 경제청, 연구회 등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출직의 특성상 임기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만큼 강화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종삼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한 목소리’

인천시-국힘 인천시당 당정협 현안사업 논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날 31일 오전 시청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정승연 시장위원장, 배준영 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영종~강화 평화도로 조기 건설,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선정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서울 7호선 청라 연장(1200억원), 인천발 KTX 건설



인천시가 지난날 31일 오전 시청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사진=인천시)

(900억원), 서인천IC~공단고가교 혼잡도로 개선(356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원) 등 시급한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로 개통 55주년을 맞은 경인고

속도로는 지난 2020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가 1조4234억원에 달해 유지·관리비 총액 6694억원과 건설투자비 2994억원을 합친 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20년 넘

게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오후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수석대변인 김승원·홍정민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날 3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김승원(수원갑), 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21명의 대변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승원 수석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이 민주당 곳곳의 약점을 찌르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검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해 아프게 휘두르고 있지만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펜이 검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통해 경기도민들에 희망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날 3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대변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사진=민주당 경기도당)

저출생 심각한데 다자녀가구 기준 ‘제각각’

2명 이상, 3명 이상 ‘혼재’ 강준현 의원, 법안 발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혼재돼 있던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날 3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년 후인 2040년 생산인구는 2852만명으로 24%에 해당하는 88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박 심화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하위 법령에 정책집행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으로 혼재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 의원이 최근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엔 대표 발의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환 기자

여의도 소식

학폭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정승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김희영 기자

안산 상록갑 학부모위원회 간담회

전해철 의원



전해철(민주당, 안산상록갑·사천) 의원은 지난날 26일 안산 상록갑 학부모 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전해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 의원과 김동규·김태희 경기도의원, 김진숙·한명훈·최찬규 안산시의원, 학부모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의원과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안산지역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강송수 기자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오영환 의원



오영환(민주당, 의정부갑·사천) 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국회 분관 로템더홀에서 지난날 31일 진행됐다.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수여가 이뤄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애(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애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위

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부터 공상 추정제도가 시행되는데 △심뇌혈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지난 2020년에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뿐 아니라 위험직군 공무원들이 두루 포함돼야 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끝내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며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영욱 기자